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사드배치후보지역대책위와 전국대책회의(준) 공동기자회견문>

## **동북아·한반도 평화 위협! 핵군비경쟁 초래! 경제 타격! 주민생존 위협!**

###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당국이 지난 8일 끝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를 대결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일상 삶을 파괴하는 등 실로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배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내외 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40km가 넘는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다. 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년)나 최근 한국 국방부의 문건(2013년), 미 의회 보고서(2015년) 등에 의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이를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각을 높여 발사했을 경우 탐지가 쉽고 속도도 느려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쉬워지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PAC-3로도 노동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이 기어코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사일 전력에서 이미 대북 우위에 있고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이지스 SPY-1D 레이더 3기 등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어 대북 방어에 거의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으로 중·러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가 나자마자 중국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의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러의 반응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고착되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벌어지며,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분단이 더욱

고착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 파탄으로 남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와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면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는 들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전기, 수도 등의 간접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협상에 따라서는 운영유지비와 시설 경비도 부담할 수 있으며, 남한 방어를 명분으로 사드가 배치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남한을 방어하는데 2~4개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지역에 배치될 경우,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해 수도권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되는 3~4 지역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사드 전자파와 소음, 기지 주변 통제, 지역 농산물 기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미군 범죄 우려와 증가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군사작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우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드 배치로 왜 우리는 평화, 안보, 경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된 모든 지역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사드 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했고, 사드 배치 지역 또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기습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택, 칠곡, 군산, 음성, 원주 그 어느 지역도 사드를 수용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드가 배치될 적절한 곳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16년 7월 11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 미사일 원주배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준),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민 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주행동 우리민족연방 제통일추진회의 AWC한국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 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한국여성단체연합